
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튼튼한 실물경제,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-

2022. 12. 27.



산업통상자원부

순서

I. 2022년 업무추진 성과와 평가	1
II. 2023년 실물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	2
1. 실물경제 여건	2
2. 정책 방향	3
III. 핵심 추진과제	4
1.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	4
2.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	9
3.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	18
4.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	21

I. 2022년 업무추진 성과와 평가

□ '탈원전' 정책 폐기 및 원전수출 재개

- 원전 비중 확대, 재생e 비중 합리적 조정을 통한 에너지정책 정상화
- 신한울 3·4호기 건설 재개, 계속운전 추진, 기자재 일감 2.4조원 공급 등 원전 생태계 복원
- 13년만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수주, 폴란드 원전 수출 가시화

□ 역대 최대 수출 (6,800억불 이상) 및 외국인투자 (295억불 이상) 달성

- 경쟁국 대비 높은 수출증가율로 세계 6위 수출국 도약
* 수출증가율 ('22.1~9월) : 韓 12.2% > 伊 7.7%, 獨 1.8%, 日 0% / ('21년) 7위 → ('22년) 6위
- 車·이차전지는 역대 최고치, 조선은 고부가船 2/3 싹쓸이 (158억불)
* 수출액 ('22.1~11월) : 자동차 487억불 (+15.3%), 이차전지 90억불 (+13.9%)
- 세계 4大 반도체장비 R&D센터 유치 등 외국인투자 고도화

□ 민간 주도 성장전략 수립 및 성장걸림돌 제거

- 337조원 투자프로젝트 밀착지원,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애로 해소
* 80%에 해당하는 268조원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개선, 인허가 신속 처리 지원
- 반도체·이차전지·조선 등 5개 주력업종별 민관합동 산업전략맵 수립
- 법과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엄정 대응 등 고질적 관행 개선

□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전개

- (美) IRA 신속 대응 및 수혜 극대화,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파급 차단
- 정상 경제외교 계기 11.5억불 투자유치(북미), 핵심광물 협력(캐나다), 40조원 규모의 MOU(사우디) 등 실질적 성과 도출

◇ 한편, 하반기 이후 3高 및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·투자 위축

◇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및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

Ⅱ. 2023년 실물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

1 실물경제 여건

□ 수출 및 투자 「쌍둥이 절벽」 우려

-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부진으로 수출 △4.5% 감소 전망
* 경제성장률('22 → '23년) : (美) 1.8% → 0.5%, (EU) 3.3% → 0.5%, (中) 3.3% → 4.6%
- 고금리 및 수요위축으로 설비투자도 전년에 이어 감소 예상
* 설비투자 증감률 : ('22년) △1.8% → ('23년) △2.8%

□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

- (美) IRA, (中) 중국몽(中國夢), (日)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글로벌 생산기반의 자국내 흡수전략 적극 추진
- (EU)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, 원자재법 등 새로운 무역장벽 등장
- 프렌드 쇼어링, 블록화 등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 변화 진행

□ 세계적 에너지 위기의 상시화

- 에너지 가격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
* '23년 가격전망(WB 등) : 석유 92\$/bbl, 가스 31~35\$/MMbtu, 석탄 241~322\$/ton
최근 5년내 최저가 대비 석유는 4배, 가스는 24배, 석탄은 5배 폭등
- 자원무기화, 에너지확보 경쟁으로 '가격'과 함께 '수급' 우려 증대
* 美·英은 러産 석유·가스 금수조치('22.3월), 러는 EU에 가스공급 중단(5월)
-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필요성 증가로 원전과 재생e 수요 동시 증가
* 유럽은 물론 동남아 등 세계 전역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 증가

◇ '23년에는 각종 불확실성에 따른 실물경제 어려움이 현실화될 전망
⇒ '위기 대응'을 최우선 하면서도, '미래 성장'에 대한 대비도 철저

'26년
비전

「수출 5위 + 제조 3위 + 경제영토 1위」 달성

'23년
목표

- ▶ 수출 플러스 달성
- ▶ 투자주도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충
- ▶ 저소비·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
- ▶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

전방위 수출 확대

- ▶ 3大 수출 애로 해소
* 무역금융, 인증, 마케팅
- ▶ 시장맞춤형 수출전략
- ▶ 원전·방산·해외플랜트 수출
- ▶ 수출 부처의 수출역군화

산업 활력 회복

- ▶ 3大 투자 활성화
* 설비, R&D, 외국인투자
- ▶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디지털·그린 전환
- ▶ 미래 성장동력 발굴
* 바이오경제2.0, 에너지 르네상스, 산업대전환
- ▶ 지역 일자리 확충

에너지 안보와 시스템 혁신

- ▶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
- ▶ 에너지 자급률 제고
* 원전 및 재생e 동반 확대
- ▶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
- ▶ 에너지 시스템 혁신

국익우선 통상

- ▶ 자국우선주의 선제적 대응
- ▶ 新통상규범 주도
- ▶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
* ODA 고도화
- ▶ 부산엑스포 유치

Ⅲ. 핵심 추진과제

1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

- ◇ 세계경기 둔화, 반도체價 하락으로 수출 Δ 4.5% 역성장 전망(Δ 300억불)
- ◇ 자원부국·신흥시장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**수출 플러스 달성**
 - * 경제성장전망 ('23년, IMF) : 인도 6.1%, 인니 5.0%, 아세안 4.9%, 사우디 3.7%, 中 4.4%, UAE 4.2%

1 수출 3대 애로 해소

□ 무역금융 : 역대 최대 360조원 공급으로 수출기업 금융경색 완화

- 수출신용보증 한도 2배 확대 및 원전·방산기업 신속보증 도입
 - * 중소/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한도 : (現) 100/200억원 → (改) 200/400억원
- 수출 중소기업 성장금융 신설 등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
 - * 성장금융 : 수출초보기업이 운영자금 대출시, 90%까지 보증 (1천억원)
처리용자 : 수출 1천만불 이하 中企, 최대 2.7%p 이차보전 (1천억원)
- 환변동 보험료 할인 확대 및 수입보험 특별지원 연장 (~'23.6월)
 - * 환변동 보험 : (現) 중소 15%, 중견 10% 할인 → (改) 30%p 추가 할인
수입보험 : (품목) 주요자원, 시설재 등 → 쏘품목(사치재 제외), (한도) 50억원 → 최대 100억원

□ 인증 :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

- 「해외인증지원단」(국표원) 신설을 통한 쏘주기 인증 지원체계 확충
 - * 전주기 지원(정보제공-컨설팅-시험-평가)을 위한 12개 기관간 MOU 체결 ('22.12.29일)
-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해외 상호인정 지원품목 확대 ('22년) 120개 → ('23년) 150개)
- 소비재 수출의 최대 걸림돌인 위조상품 방지를 통한 K-브랜드 보호
 - * 특허청 위조상품 모니터링 국가 : (기존) 中·아세안 + ('23년) 美·EU

□ 마케팅 : 전시회, 수출바우처, 전문무역상사 확대 등 맞춤형 지원

-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대상 확대 (‘22.上) 624개社 → (‘23.上) 1,000개社)
- 스타트업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신규 지원
 - * 수출 10만불 이하 기업 지원 신설, 소비재·서비스기업 지원한도 상향 추진
- 전문무역상사 육성(330 → 400개社) 및 지사화 사업을 통해 4천개사 중소기업을 밀착지원하고 해외판로 개척 등 해외지사 역할 수행

◇ 수출 마케팅·인증·물류 예산의 2/3(9천억원) 상반기 집중 투입

② 수출 저변 확대

□ 청년 무역인 : 매년 1,500명 양성으로 「청년 수출붐」 조성

- 교육-취업-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 가동
 - ▶ 교육 : 지역특화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, 디지털무역 인력양성 사업
 - ▶ 취업 : 4대 권역별 무역인력 채용박람회
 - ▶ 창업 : 글로벌 무역인 창업지원 (창업멘토링, 마케팅 교육, 플랫폼 운영)
- 주요국 바이어 및 유망품목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 무역인의 정보부족 애로 해소
 - * 「디지털 무역의 날」(매년 11월)을 신설하여 청년 무역 성공사례 확산

□ 디지털 무역 : 「국민 누구나 수출하는」 지원체계 조성

-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확충 (고양, 인천, 부산 등 6개소 신설)
 - * 콘텐츠 제작, 입점, 매칭,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의 쏠 주기 지원
- 화상상담 확대(1만건), 빅데이터·AI 기반의 거래처 매칭, 바이어 정보 통합제공 등 디지털무역 인프라 확충
- 수출 잠재群의 상품 및 기업 정보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(‘23년 3만개社)

③ 시장별 맞춤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

□ 전략시장 : 고유가, 脫석유, 안보불안 → 원전, 방산, 인프라 수출

◇ 신흥시장 및 자원부국에 무역보험 우대, 지사화 확대 등 집중 지원

- 중동 : 脫석유, 산업화 → 사우디 MOU 후속조치, 플랜트·인프라 진출
 - ▶ 에너지 : 원전 수출, 수소·재생e 분야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
 - ▶ 제조업 : 한-사우디 「Vision 2030」을 통해 자동차, 조선, 방산 진출
- 중남미 : 한류 붐, 자원부국 → FTA 활용 소비재 수출, 자원협력
 - ▶ FTA : 태평양동맹(PA), 에콰도르, 메르코수르 등과의 신규 FTA 체결
 - ▶ 자원협력 : 칠레·아르헨티나(리튬), 브라질(니켈), 멕시코(무수불산) 등 광물협력 강화
- EU : 에너지 위기, 안보 불안, 탄소중립 → 방산, 원전, 친환경
 - ▶ 원전·방산 : 폴란드·체코 원전 시장개척단 파견(5월), 방산 거점무역관 확대(20→30개소)
 - ▶ 친환경 : 무역장벽 대응반 운영, ESG 실사 대응 지원('23년 13억원)

□ 주력시장 : GVC 및 소비 트렌드 변화 → 새로운 수출아이템으로 승부

- 미국 : IRA, 공급망 재편 → 유망 프로젝트 수주, 소부장 수출
 - ▶ 프로젝트 : 韓·美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반 신설 → 수주정보, 법률상담 등 종합지원
 - ▶ 진출연계 : 배터리, 반도체, 소부장 등 현지업체 납품 지원
- 중국 : 봉쇄 완화, 내수 확대 → 실버·엔젤·싱글용 프리미엄 소비재
 - ▶ 소비재 : 중국내 소비재 거점 무역관 3개소 추가(항저우, 선전, 상하이)
 - ▶ 친환경 : 탄소중립 경험 플라자(베이징), 스마트팜 플라자(청두-쿤밍)
- 아세안 : 생산기지, 거대 소비시장 → 중간재, 한류·할랄 소비재
 - ▶ 소부장 : 아세안 소재 글로벌기업-국내 소부장간 파트너링(차부품, 전기전자, 의료기기)
 - ▶ 소비재 : '할랄 수출지원기관 협의체' 구축, 할랄시장 정보제공·컨설팅·인증지원('23.上)

□ 잠재시장 : 경제발전·인구증가 → 기술지원 등 ODA 고도화, 공급망 협력

- 아프리카 : 보건·식량 문제, IT 확대 → 의료, 스마트팜, ICT 진출
 - ▶ ICT 연계 : 공공행정·에듀테크 분야 조달정보 제공, 국내기업-현지바이어 매칭
 - ▶ 의료보건 : 바이오헬스 수출상담회(5억원, 330개社)
- 대양주 : 신재생e, 광물 풍부 → 에너지사업 수주, 광물 협력
 - ▶ 국내 주요기업 ESS 등 수주지원, 한-호 핵심광물 MOU 라운드테이블 등 추진
- 인도 : 인구 세계 1위, 스타트업 3위 → 온라인 소비재, 스타트업 진출
 - ▶ 소비재 : 식품, 화장품, 패션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, 한류박람회(10월, 뉴델리)
 - ▶ 스타트업 : 현지진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, 스타트업 중점무역관 확충

4 유망분야 수출산업화

□ 원전 : 수출성과 본격 창출 및 시장확대 총력 지원(‘30년까지 원전 10기 수주)

- 폴란드 : 사업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차질 없는 원전 수주
- 체코 : 산업·에너지·문화 등 패키지 협력을 통한 수주 가능성 극대화
 - * 첨단기술 협력, 수소 및 CCUS, 문화 교류, 한-체 직항로 재개, 원전 안전 규제 등
- 신규 : 필리핀, 영국, 튀르키예, UAE 등과 전략적 협력채널 구축
 - 원전 수주와 함께 핵연료공장(UAE), 안전설비(루마니아) 등 기자재 수출도 적극 추진

□ 방위산업 : '23년 170억불(금년수준) 이상 수주 목표

- * 수주실적 : (‘19년) 24.7억불 → (‘20년) 29.7억불 → (‘21년) 72.5억불 → (‘22년) 170억불
- 민·군 겸용 R&D에 5년간 1조원이상 투입
 - *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(‘23년~‘27년) 수립
- 40개 핵심 방산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 및 생태계 조성 (~‘27년)
 - * 엔진, 변속기, 항법장치 등 '방산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' 수립 (산업부·국방부)

- 방산과 연계한 맞춤형 산업협력을 전개하고 수출금융, 방산선도 무역관 확대('22년) 20개 → ('23년) 30개) 등 수출지원 강화
 - * 방산 + 에너지(원전, 수소, 친환경), 인프라, 첨단제조 등을 연계한 패키지 구성
디지털무역플랫폼을 활용해 유망품목과 유력 바이어를 발굴하여 정보 제공

□ 해외플랜트 : '23년 300억불 수주 달성

- * 수주실적 : ('19년) 172억불 → ('20년) 275억불 → ('21년) 270억불 → (~'22.11월) 207억불
- 전통플랜트 수주 지속, 친환경플랜트 시장 선점의 투트랙전략 추진
 - ▶ 전통플랜트 : Oil & Gas, 산업시설, 발전·담수, 석유화학, 해양플랜트, 기자재 등
 - ▶ 친환경플랜트 : 연료전지 등 수소생산유통활용, 태양광 등 재생e 설비, 폐기물 소각·매립 등
- 중동(UAE), 남미(브라질) 등의 전략거점 수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장조사, 컨설팅, 기자재 인증 등 통합 지원 ('23년 85억원)

⑤ 조부처의 수출역군화

□ 대통령 주재 「수출전략회의」를 통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

- 범부처 수출 지원정책 강화 및 품목·시장별 수출전략 수립, 신속한 수출애로 해소를 통해 제2의 수출입국(輸出立國) 전개
- 지역맞춤형 수출대책 마련 및 시장개척을 위한 「수출카라반」 운영

□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강화

- 조부처의 수출 역량 확충 및 부처간 협업 활성화 (수출지원협의회)
 - ▶ 농식품부-국토·해수부 : [신선식품]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인프라 활용방안 모색
 - ▶ 복지부-산업·중기부 : [의료기기] 바이오·의료 분야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
 - ▶ 문체부-산업·중기·농식품·해수부 : [한류콘텐츠] 통합전시회 등 다부처 협업마케팅 강화
 - ▶ 산업부-기재·문체·과기부 : [無통관수출] 통계시스템 구축 및 지원 강화로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
- 수출지원기관의 역량 제고 및 新분야 지원 강화 (수출지원기관협의회)
 - ▶ 공동 인력양성 및 인력교류 활성화, 기관간 정보 연계 ('22년) 68개 → ('23년) 80개)
- 전략·신흥시장의 해외공관 역할 강화 및 KOTRA 무역관 확대

2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

1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및 일자리 확충

□ 설비 투자 : 민간투자 프로젝트('23년 100조원 규모) 맞춤형 지원

반도체	자동차+조선	기타
▶ 평택 공장 신·증설 ▶ 용인 클러스터 조성	▶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 ▶ 스마트조선소 구축	▶ 송도 바이오 공장 설립 ▶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증설

○ 규제 개선 및 인허가 신속 지원

-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방식을 민간수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 (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 마련, '23.上)
- 인접 지자체 상생인센티브 체계 마련,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 (첨단산업특별법) 등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

* 상생인센티브 : 기업투자에 따른 혜택을 인접 지자체간 공유하는 방안 마련

○ 세제, 입지, 금융 등 투자인센티브 대폭 확대

-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(최대 3~4% → 10%) 및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(신성장·원천기술 - 에너지절약 기술 등 검토)
-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(첨단산업특별법) 지정을 통한 신속한 입지조성과 용수·전력 등 인프라 국비 지원
-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설비 및 R&D 투자지원을 포함하여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

□ R&D 투자 : 마중물 R&D('23년 5.6조원)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유인

○ 정부의 산업 R&D 지원을 초격차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집중

초격차	▶ 반도체, 미래 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→ R&D 70% 이상 집중
탄소저감	▶ 철강, 석유화학 등 4대 탄소 多배출 업종 → '23년~'30년간 9,352억원

○ 기업의 R&D 및 사업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

- 혁신박스 도입을 통한 특허 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검토
- * 네덜란드, 호주 등이 R&D 사업화 촉진과 첨단산업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既도입
- 공공연구의 기술양도 허용 및 기술창업으로 '스타연구자' 배출

-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창출과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(CVC) 적극 육성
 - 현장수요를 반영해 CVC 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
 - 2천억원 CVC 펀드 조성 및 CVC 투자연계형 R&D 지원
-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원천 차단
 - 사모펀드를 통한 M&A 및 모회사 인수를 통한 간접취득 등 해외유출 사각지대 보완(「산업기술보호법」 전면 개정)
 - 산업기술관리 실태조사 대폭 강화, 관계기관 합동 집중 단속
- 세계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경쟁 동향, 기술수출 유망분야 등 정보제공

□ 외국인투자 :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불 이상 유치

- 3대 산업별 100대 핵심 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유치

구분	첨단산업	주력산업	미래산업
방향	▶ 기술초격차 확보	▶ 디지털·그린 전환 촉진	▶ 新시장 선점
대상	▶ R&D 센터 ▶ 공급망 핵심기업	▶ 친환경 혁신기업 ▶ 스마트 기술·소재 기업	▶ 바이오 기술선도 기업 ▶ 디지털 융합제품 기업
IR	▶ 인터배터리 전시회(6월 獨)	▶ 미래차 전환 IR(3월 佛)	▶ 바이오·헬스케어 IR(6월 美)

-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전담팀 구성 및 유치시 보상체계 강화

* 전담팀 : 수요기업 + 산업부, 지자체, 코트라, 해외공관
외국인투자 유치 기여 기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추진

- 첨단전략업종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

- 첨단전략기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확대(40 → 50%), 국비분담률 10%p 상향 추진
- 현금지원 대상 외국인투자·유턴기업의 범위 확대 추진

* 첨단산업 전환형 외국인투자 (기존 공장내 공정전환용 설비투자) 및
공급망 내재화 유턴(해외 아웃소싱 → 국내 인소싱)까지 현금지원 확대 적용 추진

- ◇ 투자·규제애로 종합접수센터(대한상의) 및 실물경제 투자지원반(산업부) 가동
- ◇ 코트라 IK(Invest KOREA)는 역량제고를 통해 외투 전문조직으로 혁신

②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 추진

□ 첨단산업 :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

반도체

주요국 투자유치 경쟁 → 신속·과감한 민간투자 지원

- 신규 국가산단 조성(국토부·산업부 협업) 및 필수 인프라 지원 ('23년 1천억원)
- 3대 시스템반도체 (전력·차량·AI),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 (1.2조원 예타)
 - * 첨단패키징 기술로 異種칩간 결합을 통해 미세공정의 난제 해결
- 반도체 아카데미 개설, 특성화 대학(원), 마이크로 학위제를 본격 추진을 통한 석박사 인재(1,200명) 및 실무인력(7,100명) 압축 양성

이차전지

IRA 등 공급망 블록화 → 핵심광물 및 차세대 기술 확보

-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세제지원, 사용후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美 IRA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
- 국내공장과 해외공장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내-해외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
 - － 국내는 핵심기술·고사양 첨단제품 생산의 Mother Factory로, 해외는 범용 기술 기반 양산기지로 활용
- 이차전지 설비투자 및 R&D 등에 '23년 5.3조원 정책금융 집중지원

디스플레이

중국 추격 심화 → 무기발광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으로 패권 장악

* OLED 시장 점유율 : 韓 82% vs. 中 16% / 핸드폰용 2년 격차, TV용 4년 격차

- 중국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8세대 OLED 시설투자 착수
 - * 기존 기술 대비 생산량 2배 확대(6세대 36장 → 8세대 72장) 및 가격 30% 절감
 - －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세액 공제 확대(3→8%)
- 투명 OLED 실증사업을 통한 차량, 건축, 열차 부문 신시장 창출
- 무기발광디스플레이(나노 LED, Micro LED) 기술선점(1조원 예타 추진)을 통한 디스플레이 미래 패권 확보

□ 주력산업 : 디지털·그린 전환을 통한 新주력산업으로의 재도약

자동차

전동화 + 자율주행 → SDV 중점투자 및 부품기업 전환

* SDV : Software-Defined Vehicle,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

- 자동차 SW 플랫폼과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자동차-SW 융합인력 1만명 압축 육성(∼'30년)
- 내연차 부품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^(가칭)‘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특별법’을 제정

조선

인력부족 + 환경규제 → 스마트화 및 친환경船 우위 유지

- AI·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하고, 스마트 야드 등 조선 서비스 수출로 연계
- 저가수주에 따른 산업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
 - * 수주적정성 확보방안 등 관계부처 공동 연구('23년)
- ①전기추진선 기술의 국산화 및 대형화, ②수소·LNG선박 핵심 R&D, ③자율운항선박 실증 등을 통해 친환경·자율선박 기술선점

철강

CBAM + 전기차 수요 → 친환경 전환 및 고급강 개발

* CBAM :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, 탄소국경조정제도

- 수소환원제철, 전기로 효율화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(∼'30년, 2천억원)
- 탄소배출량 측정, 검인증 인프라 구축 등 CBAM 대응기반 구축
- 친환경 고급강 (전기차用 전기강판, LNG선用 고평강) 생산·개발 지원

탄소복합재

항공·UAM·방산 수요 확대 →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

- 고성능 탄소복합재 원천기술개발 및 3대 분야 실증 프로젝트 (UAM, 소형발사체, 소형 인공위성)를 통해 '30년 100% 기술 자립화
- 민간투자(∼'30년 2.1조원) 밀착지원 및 ‘탄소복합재 얼라이언스’ 구성('23년)

□ 산업공급망 3050 전략

※ 2030년까지 국내 생산품목 비율 50% 이상, 특정국 의존도 50% 이하 달성

자립화

핵심 소부장품목의 국내 생산비중 대폭 확대 (29 → 50%)

- 바이오·우주·방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고(150 → 200개), 200대 소부장 으뜸기업 육성

* 소부장 으뜸기업 : ('22년) 43개 → ('26년) 100여개 → ('30년) 200개

으뜸기업 지원 : 전용R&D 지원, 공공 Test-bed 개방, 수출바우처 제공

- 미래차·바이오 분야 소부장특화단지 추가지정을 통해, 생산기반 확대
- 이차전지 소재, 반도체 희귀가스 등 핵심 소부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패키지형 R&D 지원

* (現) 품목단위 핀셋형 지원 → (改) 밸류체인 전주기 동시 R&D ('23년 200억원)

다변화

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(60 → 50%)

- 업종별 밸류체인 분석을 통한 공급망 안정품목 확대(119 → 200개)
- 소부장 특별법 개정('23.上)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지원체계 마련
 - ▶ 대체 수입처 발굴 → 검증 및 성능시험 → 신속통관 등 전주기 지원
 - ▶ 민간비축 확대, 해외 생산기지 확보 및 유사시 생산품목의 국내 반입 촉진

수출산업화

자립을 넘어 글로벌 소부장 생태계 주도

-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R&D 확대

* 차량용 고탄소강 분야 : (해외기관) 프라운호퍼, 난양공대, (수요기업) 현대차

- 해외 수요기업 매칭 지원을 통한 소부장 GVC 수출 확대

* 예)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: 테슬라 등 해외 전기차에 납품 확대

3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

□ 지역경제 기반 확충

- 지역 주도로 선정한 전략산업에 R&D, 실증인프라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 클러스터 혁신 역량 강화 및 중복·분산 투자 방지
-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정 및 적극적 세제, 규제 특례 적용 추진
- 지역 주도 투자프로젝트 (14개 시·도, 538건, 50조원) 밀착 지원
 - * 충북 이차전지(4조원), 구미 기판소재(1.4조원), 울산 이차전지 핵심소재(1조원) 등 지방투자보조금 지원한도(現 100억원) 확대 및 고용보조금(지식서비스업) 신설

□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연계형 지역투자 확대

- 「한국형 쿼 스타트 프로그램」('23년 2개 지역 시범사업)을 통해 지방 투자 기업의 적기 인력확보 지원
- 지방 대학과의 채용 연계형 공동 R&D, 계약 Lab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기업의 기술·인력 부족해로 해소
 - * 공동 R&D 및 교육과정 개발·운영에 3개 컨소시엄별 연간 9억원 지원('23년)
- 지방주도형 투자·일자리 사업 확대

□ 산업단지의 디지털·저탄소 전환 및 안전관리 강화

- 입주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대진단 실시(컨설팅 → 개선방안 → 투자 패키지 지원) 및 공정혁신을 위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센터 등 구축
- 단지별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저탄소 산단 확대('22년 3개 → '23년 10개)
- 유해·위험물질 밀집 지역 대상, IoT,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

◇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구축 → 지방시대 원년

- * 균형발전·지방분권 통합법 제정 및 지방시대위원회 설치
- * 시·도 및 초광역 발전계획을 반영한 상향식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

4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대전환 추진

□ 바이오경제2.0

◇ ICT 이후 새로운 板기술로서 바이오를 산업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으로 본격 활용할 필요(기후위기, 식량난, 질병문제 해결의 기반기술로 육성)

* (바이오경제1.0) 의약품 위탁제조 → (바이오경제2.0) 소재, 에너지 등 3차산업으로 확대

바이오 데이터

빅데이터 확보 및 의료·금융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

-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·활용(복지부 등과 협업)
 - *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('24~'32년, 9,988억원 예타 심의중)
-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, 건강보험 DB 등 연계 추진

바이오 소재

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하는 바이오 新소재 개발

- 핵심 바이오 소재 개발 선도 프로젝트 추진('23년 690억원, 과기·농식품부 공동)

유형	주요 소재
바이오 新소재	▶ 바이오플라스틱, 바이오 비료, 바이오 색소·염료, 효소
식용소재	▶ Lab-grown Meat, 마이크로 바이옴 기술, 건강기능식품 소재
바이오 치료소재	▶ 바이오의약품, 바이오 백신소재, 인공피부, 봉합사

- 바이오 파운드리(3천억원 예타진행중, 과기부 공동) 구축 및 테스트베드 제공

바이오 에너지

수송·산업용 바이오연료 개발 및 상용화 추진

- 원료발굴 - 바이오 연료생산 - 소재개발 등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R&D 추진(4천억원 예타기획중)
- 바이오 항공·선박유 실증사업 및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통한 사업화 촉진

바이오 제조

바이오경제를 뒷받침할 첨단 제조기반 구축

- 고효율 바이오 리액터 등 혁신 바이오 소재용 제조장비 개발
 - * 예) 고효율 바이오파워, 단백질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제조기술개발('22~'28년, 410억원)
- 바이오 제품의 디지털 제조공정 기술 개발('23~'27년 398억원)
- 대학과 연계한 바이오 아카데미를 통해 바이오 융합인재 양성
 - *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 양성사업('22~'25년, 110억원, 복지부 공동, 5개 대학 375명 양성)

◇ 바이오경제 본격 추진을 위해 범부처 '바이오경제2.0 로드맵' 수립('23.上) 및 민관 합동 '바이오경제 전략회의' 신설 추진

□ 에너지 르네상스 : 5대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

수소

밸류체인 전주기별 대규모 투자 확대

-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('23.上)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('23.下)을 통한 수소산업 시장조성 추진
- 민간주도 액화수소 플랜트(연간 4만톤 규모) 구축 및 액화수소 활용을 위한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('22년) 350대 → ('23년) 920대, 환경부)
- 발전 유형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 본격 착수

* LNG 발전소 : 수소 50% 혼소, 석탄발전소 : 암모니아 20% 혼소

해상풍력

실증과 대규모 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초석 마련

- 핵심부품 국산화 및 10MW급 대형터빈 개발·실증 착수('23.下)
- 계획입지 도입,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풍력특별법 제정
- 美·유럽 핵심기술 선도기업 유치로 아태지역 해상풍력 허브 도약

CCUS

탐사·실증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민간 투자유치

- 연 40만톤 규모 동해 가스전 CCS 전주기 실증 기획 추진
 - 서해 군산분지 시추 등 대규모 저장소 탐사 추진 (해수부 공동)
 - CCUS 클러스터 확대 및 경제성 보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제 도입
- * 클러스터 : ('22년) 강원(석화, 시멘트), 전남(석화, 제철) + ('23년) 충남(석탄, 화력발전)

고효율 기자재

보급 확대를 통한 국내 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촉진

- 효율등급제 대상 확대 및 효율기준 상향 등 효율제도 고도화
- * (산업설비) 팬, 펌프 등, (가정기기) 식기세척기, 이동식에어컨, 의류관리기 등
- 에너지절약시설 융자('23년 2,633억원), 설비교체 보조('23년 85.6억원)

스토리지

차세대 ESS 육성을 통한 스토리지 산업 선점

- 非 리튬(나트륨황 등), 非 전지(축열발전, 압축공기 등), 장주기 ESS 등 차세대 스토리지 개발
- 에너지 스토리지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('23.上)

□ 산업대전환 전략 추진 (산업대전환 포럼에서 도출된 민간 제안을 중심으로 정책화)

- ◇ 투자활력 저하, 인구 절벽, 생산성 정체로 인해 제로성장 직면
⇒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미래먹거리 창출 불가능
* 경제단체 및 민간 전문가와 '산업대전환 포럼' 운영중('23.5월 '종합전략' 발표 예정)

투자주도성장

투자환경 개선 및 혁신금융 확충 → 투자특국(特國)

- 노동·환경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갈라파고스 규제 해소
- 국가투자지주회사(한국형 테마섹) 및 첨단산업 기준국가 제도 도입
* 반도체 등 산업별 핵심경쟁국 선정 → 경쟁국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보장

산업인재 확충

대학, 산업계, 해외인재를 삼각축으로 융합인재 압축 확보

- 반도체 아카데미 등 산업계가 인력을 직접 육성하는 新모델 도입
* '23년중 '산업인력혁신특별법' 을 제정, 체계적 지원 및 규제개선 추진
- 한국이 세계 두뇌의 용광로(melting pot)가 되도록 외국인재에 대해 특별비자, 영주·귀화 패스트트랙, 정주지원 등 파격적 유인책 제공

생산성 혁신

AI 내재화를 통해 산업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

- '30년까지 AI 활용기업 1% → 30%, 글로벌 AI 공급기업 100개 육성
- AI 융합형 제품, 서비스, 공정혁신 등 산업별 AI 시범사업 추진
* 민간주도 산업 AI 얼라이언스 구성 → '산업 AI 내재화 전략' 수립('23.上)
- 첨단산업 분야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확대, 6G·AI 등 국제 표준 선점 등을 통해 글로벌 특허 및 표준전쟁에서 우위 확보
- 미래 기술에 기반한 新 비즈니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
* "더 편하게" (첨단제조 서비스, 자율주행 UAM, 스페이스 테크), "더 깨끗하게" (차세대 원전, 그린수소, 순환경제), "더 건강하게" (전염병 대응 바이오, 디지털 치료제, 푸드 테크, 배양육)

기업 생태계

기업 성장사다리 및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

- 기업규모별 기업지원제도를 성장 촉진형(중소→중견→대)으로 개편
- 산업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기업가의 역할을 교과서에 반영하여 기업가정신 고취
- '기업영향 평가제도'를 통한 각종 규제의 사전 영향분석

3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

◇ 튼튼한 에너지 안보의 기반 속에서 미래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,
에너지 시스템의 선진화 추진

1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

□ 계획된 원전의 차질없는 건설 및 생태계 강화

- 신한울 3·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완료하고('23.上),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및 부지정지공사 착수('23.下)
 - * ('23.上) 환평 완료 → ('23.下) 실시계획 승인, 부지정지공사 착수 → ('24년) 건설허가 및 착공
- '23~'25년 매년 1기의 원전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
 - * ('23년) 신한울 #2, ('24년) 새울 #3, ('25년) 새울 #4
- 전년 대비 1.1조원 증가한 3.5조원의 일감을 공급하고, 원전분야 인력 공급체계의 재활성화
 - * 원전산업 전문인력양성방안 수립('23.上), 채용·교육 지원 강화('22년 28억원 → '23년 44억원)

□ 계속운전 조속 추진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역량 강화

-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전 계속운전(~'30년 총 10기) 절차 신속 진행
 - * 고리 #2·3·4 운영변경허가 신청, 한빛 #1·2 및 한울 #1·2 안전성평가 신청('23.下)
-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마련 및 한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발주(고리), 예타(한빛·한울) 착수
- 대국민 원전 인식 개선을 위한 원전소통 지원센터 신설

□ 원전 혁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

- 혁신형 SMR 전담사업단 출범 및 혁신형 SMR 개발 본격 개시
 - * 1차년도 연구 개시('23~'28년, 총 3,992억원)
- 원전 안전성 향상 및 핵심 부품·기자재 혁신기술 지속 개발
 - * 원자력 R&D 지원 : ('22년) 1,674억원 → ('23년) 1,736억원

②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

□ 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

- 가스·석유 등 비축 용량 대폭 확충 및 적기 도입으로 수급 안정화
* (가스) 당진 기지 1단계 시설 구축(108만㎥ 규모, ~'29년), (석유) 47만 배럴 추가 확보('23년)
- 리튬, 니켈, 네오디뮴, 흑연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 개발·확보를 통한 이차전지, 전기차 등 첨단 수요산업 성장 뒷받침
* 핵심광물 전략비축 확대 : ('22년) 54일분 → ('31년) 100일분, 글로벌 수급 지도 개발·보급
- 양자다자간 협력 강화,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제지원 추진('23년)
* (양자) 캐나다, 칠레 등과 MOU 체결 추진, (다자) MSP, IEA 협의체 프로젝트 활용

□ 원전과 재생e 동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

- 태양광 편중 완화를 위한 풍력 보급 확대 (태양광:풍력 '30년 6:4)
* 풍력 설비 전망(누적) : ('21년) 1.7GW → ('22년) 1.8GW → ('23년) 2.2GW
- 탄소배출기준 강화를 통한 국내 제조 태양광 모듈의 경쟁력 제고
- ESS, 유연성 설비 확충 등 전력계통 혁신방안 마련('23.1Q)
-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투자 펀드(3천억원)를 조성하고,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「CF 인증체계」 도입 검토
* Carbon Free : 원전, 수소, 재생e 등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체를 포괄

□ 에너지 인프라 확충 ('23년 20조원 투자)

- 원전, LNG,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 공급 설비 지속 확충
- 사회적 수용성 확보 지원, 송전망 투자 확대 등 전력계통 확충을 위한 종합패키지 마련('23.1Q)
- 대규모 민간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*에 대한 밀착지원
* 인천·울산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4천억원, 수소충전소 투자 프로젝트 947억원, 수상태양광 발전소 1,600억원, 해상풍력 5개 프로젝트 약 3,700억원 등

□ 에너지시스템 혁신 추진

□ 에너지 요금 정상화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

-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로 가격기능 회복과 소비효율화를 유도하고,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
- 에너지바우처, 연탄쿠폰 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

* 에너지바우처 단가 : ('22년) 12.7만원 → ('23년) 19.5만원

* 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급여 시스템과 연계한 자동신청 도입

□ 에너지 저소비-고효율 구조로의 전환

- 에너지 효율관리의 사각지대인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「효율진단-용자·보조-스마트 관리」 등 효율혁신 3종 패키지 집중 지원
- 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(FEMS) 표준화 및 보급 확대('23년 270개), 가정용 AMI 확산(~'23년 약 160만호) 등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
- 효율관리 제도화 등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개정

*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지원사업(EERS) 의무화, 다소비건물 목표관리제 도입 등

□ 에너지 안전관리 체계 강화

- 보험료 연계 인센티브를 활용해 민간 주도, 시장 중심으로 전기·가스 안전검사 체계 혁신

*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

- 안전기술기준 강화 및 시설·장비 지원 확대('22년 대비 2배) 등 광산 안전종합대책 수립·추진('23.1월)

□ 공정한 시장구조 및 에너지 거버넌스 확립

- 요금결정의 독립성·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기위원회 확대 개편

* 연내 전기위원회 개편 기본계획 수립

- 발전원별 시장 다원화 및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제도 개편

* 전원(電源)특성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, 실시간·가격입찰 방식 도입('23년 제주 시범도입)

- 전력생산-수요지역 불일치 완화 등을 위한 분산e 종합대책 마련

* '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의 86%가 수도권에 위치 전망

4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

◇ 자국우선주의에 선제 대응하여 경제영토 90% 이상 확보

*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 : 現 85.4% → '26년 90%

1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 강화

□ 자국우선주의 선제적 대응 및 수혜 극대화

- 미국 :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IRA·반도체법 등에 집중 대응
 - * 한-미 공급망·산업대화(SCCD), 한-미 IRA 대화채널 등
 - IRA는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
 - * 배터리 점유율 확대, 청정에너지 투자, 상업용EV 진출 등 인센티브 극대화
 -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대응으로 반도체 해외사업 영향 최소화
 - 바이오행정명령은 R&D, 투자 인센티브 적극 활용 방안 마련
- EU : 對EU 통상 컨트롤타워인 '통상현안대책반' 구성, 전방위 대응
 - CBAM 관련, EU에 WTO 합치, 각국 기후정책 인정 등을 요구하고, 철강 등 주요 업종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
 - 핵심원자재법·역외보조금 등에 도입되는 기업 의무부담 완화

□ 美·中 패권 경쟁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 최소화

- 韓·美 수출통제 위킹그룹을 적극 활용, 우리 기업에는 對中 반도체 통제 예외를 확보하여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완화
- 미·일·대만이 함께하는 Fab4는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,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고려
- 중국 중앙·지방정부와 다층적 협력으로 진출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
 - * (중앙)산업장관회의·통상장관회의('23.중) / (지방)산동·장쑤·광둥성 협력 교류회('23.下)

2 新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통상협력 강화

□ 新중동 붐 조성

- ‘한-사우디 비전 2030’ 경험(MOU 26건, 40조원) 성과 조기 창출
- 脫석유를 추진 중인 UAE·카타르·오만 등 에너지 부국과 청정 에너지, 新산업 투자 협력 확대
 - ▶ 원전 수출, 수소·재생에너지 분야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(UAE 등)
 - ▶ 국가별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한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·운영
 - (UAE) 경제비전 2030 → 한-UAE 산업·첨단기술전략회의 (장관, '23.중)
 - (카타르) 국가 비전 2030 → 한-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 (장관, '23.중)
 - ▶ 중동 자본을 활용한 FDI 유치 및 해외투자 프로젝트 발굴
 - (사우디) 아람코·국부펀드 프로젝트(한-사우디 투자포럼, '23.중), (UAE) 투자MOU 체결

□ 신흥경제권역으로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

- GCC·에콰도르·과테말라 등 중남미·중동 지역과의 FTA 체결
 - * (타결추진) GCC, 에콰도르, 과테말라, (협상진전) 칠레, 멕시코, 태평양동맹, 메르코수르
 - 아프리카(이집트, 케냐)로 FTA 영역 확대 위해 경제적효과 연구 착수
- FTA 미체결국인 오만, UAE를 중심으로 TIPF도 추진
 - * TIPF(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) : 무역·투자 촉진 협력 프레임워크

□ 첨단산업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

- 자원 부국과 양자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
 - * ('21년) 호주 → ('22년) 베트남, 인도네시아 → ('23년) 캐나다, 필리핀, 모잠비크 등 7개국
- 「한-아세안 연대구상('22.11월)」에 기반하여 국가별 개발·투자 사업과 연계한 공급망 협력 추진
 - ▶ '23년 ODA : (우즈베크) 희소금속센터 상용화(150억원, ~'27년), (몽골) 희소금속 센터(98억원, ~'27년)
 - ▶ (인니) 니켈-이차전지 숲주기 투자, (필) 희토류-니켈 개발, (말련) 이차전지(소재) 등

3 IPEF·WTO 등을 통한 新통상규범 주도

□ 인태경제프레임워크(IPEF) 활용 극대화

-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(EWS : Early Warning System) 구축, 소부장 정책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급망 규범 형성 주도
 - * 핵심품목 선정, 조기경보시스템 협력, 위기대응 체계(신속통관·규제완화·공동비축) 등
- 청정경제 분야 협상을 전기차, 수소 등 관련 시장 확대 계기로 활용
- 무역규범 투명화 및 고도화를 통한 아세안 등 수출시장 저변 확대
 - * 아세안 통관절차 개선: 전자서류 교환, 통관정보 공표 강화, 반출시간 단축 등

□ WTO 개혁 등 다자무대 新통상규범 형성 주도

- 투자 및 디지털무역 장벽 완화에 주도적 역할
 - ▶ 투자조치 투명성 확보, 행정절차의 신속·간소화(한국·칠레 공동의장, 112개국 참여)
 - ▶ 전자상거래 활성화, 디지털 무역장벽완화(호주·日·싱가포르 공동의장, 86개국 참여)
- 美·EU 등과 공조하여 분쟁해결제도 기능 정상화 선도(~'24년)
 - * '19년 상소기구(2심) 운영 정지 → '22.6월 제12차 각료회의시 제도 개혁시킨 합의

□ 디지털·그린 통상규범 선도국가로 부상

- 아세안, EU 등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, 국내제도 선진화
 - ▶ 네트워크 확대 : 싱·뉴·칠 DEPA 가입협상 타결, 한-EU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, IPEF 디지털 협상 등
 - ▶ 국내제도 선진화 :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국회 논의 중
- 디지털 통상협정을 활용한 전자상거래, 디지털 서비스 수출 촉진
- 유엔기후협약 등 글로벌 기후·환경 논의·협력을 통해 업계 이익 확보
 - * 규제 수준·방식 등에서 기업부담 완화 제안, 세미나 등 정보공유, IPEF 청정경제 협상 등
- WTO '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' 등 新통상규범 적극 참여
 - * 기후 관련 각국 무역조치의 다자간 논의, 환경 상품·서비스의 무역자유화 등(74개국)

4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

□ 산업 ODA 고도화 등 신흥 개도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

○ 공급망, 그린, 기술 3대 분야 중심으로 ODA 고도화

－ 공급망 ODA*를 신설하여 개도국과 핵심광물 협력 확대

* 공급망 ODA : ('23년) 18억원(몽골, 우즈벡 / 희소금속센터)

－ 그린 ODA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지원

* 그린 ODA(산업부 ODA 中 비중) : ('23년) 256억원(40%)

－ 기술 ODA를 확대하여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 해소 등을 위한 기술전수(TASK)와 함께 국내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 촉진

* TASK(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) : ('23년) 96억원(베트남, 파라과이 등 / 농기계·금형 등)

○ 탄소 국제감축 시범사업 등을 통한 개도국 탄소중립 달성 기여 및 국내업체의 대상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 활성화

* ('23~'25년) 협정국 대상 투자/구매 시범운영 → ('25년~) 대형화 및 민간참여 확대

□ 부산엑스포 유치

○ 정부·민간 모든 주체가 'Korea One Team'으로 유치교섭 총력 전개

－ '23년 상반기에 131개국 대상으로 유치사절단, 민·관 경제사절단 파견 등 집중 추진 (현재 153개국 236회(정부 144회, 민간 92회) 접촉)

○ 국제박람회기구 공식일정 대응, 기후산업박람회(5.24~5.27, 부산) 등을 통해 산업강국, 문화강국으로서 우리의 강점과 개최역량 집중 부각

* ('23.4.3일~7일) 현지실사, ('23.6월~11월) 4·5차 경쟁 PT, ('23.下 잠정) 국제심포지엄 등

◇ 유치활동 과정에서 우리 경제·사회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, 기후변화, 디지털 전환, 양극화 등 글로벌 핵심 어젠다를 주도

◇ 경제·외교 지평 확장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계기로 활용